

# 대학의 위기와 대학 개혁의 요체

황한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대학사회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명제를 앞세운 교육 개혁의 바람을 타면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던 대학도 이제 무한경쟁시대로의 진입을 강요 당하고 있다. 이 바람은 대학이 사회 발전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사회 변화에 주체적·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바람이 본래 대학 안과 아래로부터 오는 자율적 내발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학 바깥과 위로부터 오는 타율적 외래형임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바람이 대학의 위기에 근거를 둔 것이고 나아가 매우 바람직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외래형·타율형이라는 일면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빛좋은 개살구로 변질되기 쉽다.

우리의 대학교육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정보화 시대와 산업사회의 변화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본주의적 가치 추구라는 진보성의 위기에 있다. 국가·지역·산업·가족 등 어디라 할 것 없이 우리의 사회생활 공동체는 가속적인 해체와 비인간화의 길로 치달고 있다. 진보성의 위기는 이를 직시하고 보다 나은 인본주의 공동체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비판적 지성과 민주시민의 양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대학은 지역사회의 발전 주체로서 사회적 봉사·책임에 충실한가? 현실은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의 책임있는 주체라는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내 여타 발전 주체와 대학 시스템간의 유기적·체계적 연계 발전이라는 인식도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은 고립·소외 상태에서 참여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효율과 진보의 두 원리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대학의 연구·교육·사회참여를 혁신하고자 하는 참된 개혁의 요체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대학과 사회의 기본 질서와 제도를 공정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의 특징은 공급측의 독점·서열화에 있다. 기득권자의 독점이 지배하는 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공급이나 열악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대학들간, 교수들간에 ‘좋은 교육·연구·사회참여’를 둘러싼 공급경쟁이 보장되도록 대학 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 정부의 대학 개혁 조치는 소비자 주권과 경쟁원리를 중시하고 있고, 매우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방임과 무제한적인 경쟁이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경쟁의 질서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기득권자 중심의 독점과 서열화를 촉진·강화시키고 효율성과 진보성의 위기를 심화시킬 따름이다. 대학 개혁은 사회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대학 시스템에 대한 중앙집권적 규제를 풀고 분권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강력한 집권적 규제는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고, 대학 자치의 발전이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 정책 당국도 이 점을 의식, ‘학사운영의 자율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추진하고 있는 바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핵심적인 인사권과 재정권의 실질적 분권화가 따르지 않고 대학의 제도·운영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테면 대학모형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교육부가 설정한 범위(연구중심, 교육중심, 교육·산업중심 모형)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은 대학의 다양한 개성적 발전을 가로막는 획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대학 개혁의 전 과정(기획·집행·평가)에 대한 개혁 주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전국적 차원과 개별 대학 차원에서 개혁 주체인 대학인이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면 실질적인 분권화도 별 소용이 없고, 경쟁의 강요가 또 다른 독점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며 결국 자율적 내발형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교수대표 기구가 공식적으로 학사에 참여하거나 대학평가에 대학인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끝으로 개혁의 성패는 결국 개혁 주체의 형성과 자기혁신에 달려 있다. 공정경쟁·분권·참여 등 제도적 개혁을 경시한 채 대학인들의 경쟁이나 의식개혁만 강요하는 것은 대학인 사이에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킬 뿐 개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갖추어져도(그럴 리도 없겠지만) 대학인의 자기혁신과 밑으로부터의 개혁 주도 세력의 형성 없이는 개혁은 결국 걸돌다 말 것이다. 대학 개혁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개혁 주체의 형성에 있음을 강조해두고 싶다. ▣

---

황한식/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브레멘 대학 객원교수, 부산 지역사회연구회 회장 등을 지내고, 현재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지역경제개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 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공저), 『한국 자본주의와 노동문제』(공저) 등이 있고,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지역경제론의 현상과 과제: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과 지역경제의 발전론을 중심으로”, “자본의 토지 지배와 지대법칙”,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